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제4권 1호 (2024. 3), pp.31-57
10.23045/kjpd.2024.4.1.031

OECD 회원국의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 측정과 결정요인 연구

명민주*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강사)
최동주**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 학부 교수)

〈 초 록 〉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의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고, 각국의 제도화 수준 차이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결정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각국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먼저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공외교 정책 수립 수준, 실행 수준, 그리고 종합적인 제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SPSS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공공외교 정책 수립 수준의 결정요인은 군사 안보 위협 요인이며, 실행 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변수는 재외공관 수로 드러났다. 정책 수립 수준과 실행 수준을 아우르는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국방연구비 비율과 재외공관 수이며, 그 다음으로는 GDP 대비 무역 비율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1인당 GDP는 부(-)의 영향력, 총 병력 수는 작은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공외교는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군사안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수립하는 경향이 높은 수단임이 드러났다. 공공외교의 실행은 경제적, 군사적 이익 추구보다는 외국 또는 해외 대중과의 관계로 추동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어: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 계량 연구, 실증 연구, 결정 요인

* 제1 저자, mminju@sookmyung.ac.kr
** 교신저자,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 학부 교수, djchoi@sookmyung.ac.kr

1. 서론

공공외교가 전통 외교의 한계성 극복에 필요한 외교(김태환, 2011)임이 이미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마다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이 상이하며, 모든 국가가 공공외교에 최대한의 정책적 역량을 기울이지는 못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실제 국가들을 살펴보면 어떤 국가들은 공공외교 관련 법, 예산, 실행 등 세부 요소를 탄탄히 구조화하여 공공외교를 상위 수준의 제도로 만든 반면, 어떤 국가들은 공공외교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자원 투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공공외교를 제도화하는 수준 차이가 과연 어떠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계량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다. 또한 보다 세밀한 설명을 위하여 어떤 요인들이 공공외교 제도화에 있어서 정책 수립 측면과 실행 측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공공외교에 대한 정보 파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OECD 회원국을 선택한다. 연구 방법은 각국 공공외교의 정책 수립과 실행의 수준 그리고 이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전체 제도화의 수준을 측정한 후,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통계 분석을 통해 탐색한다. 국가마다 드러나는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의 상이함은 각자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적 요인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자국의 국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은 그 정도나 형태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요인 파악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공공외교와 관계되는 요인으로 주장되었던 군사 안보적 요인, 경제적 요인(Melissen, 2005), 그리고 사회 문화적 요인(Nye, 2004)에서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2장에서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에 대한 정의와 측정 방법 그리고 구성 요소를 밝히고, 실제 OECD 회원국 공공외교의 현황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변수, 분석 방법 그리고 지수화한 OECD 회원국의 제도화 수준에 대해 살펴본다. 4장은 통계 분석 결과, 5장에서는 본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 그리고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한다.

2. OECD 회원국의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

1)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은 김선화(2020)의 논문에서 제시한 '제도'에 대한 정의에서 출발한다. 김선화(2020)는 '제도'란 개별 정책과 과정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구조화하는 상위 차

원의 틀(framework)로써(Steinmo et al., 1992, p.9; Weaver & Rockman, 1993), 정책이 제도가 되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멸하지 않고, 환경에 대응하면서 영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김선화, 2020, p.10). 이러한 제도의 정의에서 확장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이란 '공공외교의 법, 예산, 실행 등과 같은 공공외교 관련 개별 정책들이 환경 변화에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상위 차원의 틀로서 구조화되어 있는 수준'으로 정의한다.

2)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 측정 방법

나라마다 다른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을 일률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공공외교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존재 여부로 그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외교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로 공공외교에 대한 정책 수립과 관련된 요소, 그리고 실행과 관련된 요소,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 살펴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먼저 공공외교를 정책으로 수립하는 측면에서 법, 예산, 위원회를 검토한다. 공공외교의 실행 측면에서는 공공외교 조직, 공공외교 수행 기구(기관), 평가 또는 집행 계획 문서, 활용 매체인 웹 사이트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은 모든 공공외교 행위자에 의해 수행되는 일체의 비전략적 또는 산발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중앙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여 수립한 정책에 따라 실행하는 공공외교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공공외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고도 공공외교 정책을 펼치는 국가들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해당 요소가 문화외교나 소프트 파워로 명칭 되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외교라면 이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3) 공공외교 제도화 요소

(1) 공공외교 정책 수립 요소

본 연구에서 공공외교 정책 수립 요소로 분류하여 살펴볼 법, 예산, 위원회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법: 법률의 명칭이 '공공외교법' 이거나, 법 조항에 '공공외교'가 명시되는 경우 공공외교 관련 법 제도로 포함한다.
- 예산: 정부 예산이 '공공외교'로 명확히 배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공공외교' 예산이 책정된 국가는 당연히 공공외교 정책을 위한 예산제도가 수립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공외교' 명목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국가라도 문화외교 예산의 대리지표(proxy

index)가 될 수 있는 유네스코(UNESCO・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1] 기금을 납부한다면 국가차원에서 공공외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 위원회: 정부 위원회나 의회 상임위의 명칭이 '공공외교위원회' 이거나, 다양한 부서와 주체들이 공공외교적 활동과 방향, 목표 등에 관한 논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살펴본다. 공공외교에서 중요한 부문인 외교, 문화, 경제, 국방, 미디어 부문 가운데 복수 부문의 출신 위원들로 구성되어 공공외교에 대해 논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공공외교위원회로 간주한다. 또한 공공외교 활동이 다양한 수단과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공외교'라는 용어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공공외교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외교부라는 단일 부처를 넘어 다양한 주체가 어우러져 논의를 하는 다자적 위원회도 조사 범위에 포함한다.

(2) 공공외교 실행 요소

공공외교 집행과 관련 있는 실행 제도로서의 분석 요소인 기구, 문서, 부서 조직, 웹 사이트에 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기구: 내・외국 대중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외교' 전담 기구나 공공외교의 중요 분야인 문화외교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기구의 존재를 조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문화기구로는 4대륙 이상에 수행 기관을 설립하고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공공외교의 업무 영역에는 문화외교와 대외홍보 이외에 개발 협력도 포함되지만, 개발 협력은 그 해당 업무 영역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별도의 정책 방향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공공외교는 문화와 대외홍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김용훈, 2018). 따라서 본 연구가 공공외교 제도로 분류하는 기구(기관)는 공공외교라는 동일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공공외교를 추진 및 실행하는 공공외교 전담 기구, 문화원, 국제방송 담당 기구(기관) 등이다(김용훈, 2018, p. 192).
- 문서: 공공외교 백서, 공공외교 계획서 또는 평가서 등이 정기적 또는 연속적으로 발간되는 경우

1) 유네스코는 1945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37개 국 대표가 모여 창설한 유엔 전문기구이다. 목적은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문해율 향상, 의무 교육 보급, 세계 유산 등록과 보호, 문화 다양성 협약 채택, 역사 기록 유산 보전 사업 등을 실시한다. 유네스코의 정규 예산은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분담금은 각국의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분담율을 결정하는데 높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들은 분담금을 구실로 유네스코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도 한다. 2011 년 미국은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연체를 하다 2017 년 정치적 이유로 탈퇴하였다. 일본은 2017년 한중일 민간단체가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추진중이었던 위안부 기록물 자료 심사 중 당시 34억 8000만엔(약 350억원)의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면서 유네스코에게 정치적 압력을 주려고 하였다. 회원국들에게 부여되는 분담금이지만 납입은 어디까지나 회원국이 결정한다. 회원국들은 분담금 외에 자발적 기여금을 내기도 한다. (조기원, 2017).

와 외교 백서의 한 장(章)이나 일부에서 공공외교 정책이 논의되는 경우나 일회성이거나 비 정기적인 정부 발행의 공공외교 문서만 있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 부서 조직: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정부 중앙 부서 조직이 있는 경우와 재외 공관에만 공공외교 업무 부서 또는 담당관이 있는 경우로 차등을 두어 분석한다.
- 웹 사이트: 정부 외교부 웹 사이트에 공공외교에 대한 정보 수록 여부는 국가의 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국가의 관심도를 반영하며, 해외 대중에 대한 접근 수단인 디지털 외교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의 기준이 된다. 이에 정부 외교부 웹 사이트 내에 '공공외교'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거나, 자국 공공외교 정책 또는 자국 공공외교 부서 조직에 대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웹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는지 조사한다.

4) OECD 회원국의 공공외교 제도 현황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 따라 정책 수립과 관련된 요소인 법, 예산, 위원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공공외교 법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전체 OECD 회원국 중 3개국으로, 대한민국, 그리스, 미국이 관련 법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민국은 2016년 공공외교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공공외교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공공외교 정책 추진을 위한 법 제도화가 이루어졌다(김예경,2022).

그리스는 법(Law No. 4781/28.2.2021)에 의해 공공외교 사무국이 조직 및 운영되고 있고, 해당 부서의 직무, 구조, 직원에 관한 규정이 해당 법률 215~251조에 명시되어 있다(Greek Foreign Affairs Ministry, 2021).

미국은 스미스-문트법(Smith-Mundt Act)으로 알려진 1948년의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법(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Act of 1948)'의 제604호에 의거하여 미국 정보 자문위원회가 설립되었다가 1977년 공공외교 자문위원회로 개편되었다(신진, 2017, p.439). 이후 2012년에는 스미스-문트법을 수정한 스미스-문트 현대화법(Smith Mundt Modernization)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U.S. Agency for Global Media, 2023).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공공외교 현대화법(Public Diplomacy Modernization Act)'을 2019년 하원에서 발의하여 2023년 기준으로 하원 외무위원회(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U.S. Congress, 2023).

(2) 공공외교 예산

공공외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제도화하는 데 필요한 공공외교 예산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이스라엘, 대한민국, 멕시코, 그리스, 폴란드, 미국, 영국 8개국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호주는 2023~2025년 외무부 예산 보고서에서 공공외교 항목과 문화 교육 교류 프로그램인 콜롬보(Colombo) 프로그램, 그리고 관광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의 존재가 확인된다(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22).

이스라엘은 의회에 해당하는 크네세트(Knesset) 공공외교 위원회가 공공외교 예산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그 금액을 밝힌 바 있다(Ahren, 2016). 총리실의 전략・공공외교실(Ministry of Strategic Affairs and Public Diplomacy)에서 친(親) 이스라엘 해외 단체에 대한 지원과 온라인 홍보 활동 예산으로 2019년에 각각 3백만 NIS(미화 약 825,500달러)의 보조금 지출이 확인되었다(The Jerusalem Post, 2020).[2] 또한 공공외교 활동인 '콘서트(Concert)' 계획에 2025년까지 6천2백만 달러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다(Goichman, 2022).

대한민국의 경우는 2023년 대한민국 공공외교 종합 시행 계획에 따르면 약 495,678백만원이 2023년 공공외교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대한민국 외교부, 2022). 미국의 공공외교 예산은 2020년도 기준으로 전체 국무부 예산의 약 3.9%에 해당하며, 전체 연방 예산의 0.14%인 2,237.4백만불이 공공외교 예산으로 책정되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1).

멕시코의 경우, 연방 공공 행정 조직법의 외무부 내부 규정과 연방 예산법 제2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외교 전략국에 대한 예산이 승인된다(Mexico Government, 2022). 그리스는 2023년 국가 예산에 그리스 해외 공공외교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of Greeks Abroad and Public Diplomacy) 항목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고(Greek Ministry of Finance, 2022), 폴란드 외교부의 공공문화외교부에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60~70개의 조직에 보조금을 수여하였다(Charycka, 2018). 영국의 경우는 2021~22년 예산으로 공공외교라는 항목 대신에 소프트 파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 나머지 30개 국가들은 문화외교로 볼 수 있는 유네스코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UNESCO, 2023).

(3) 공공외교 위원회

공공외교에 대한 정책 결정과 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를 보유한 국가는 모두 11개국인 것으로 집계된다. 미국은 공공외교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ssion on Public Diplomacy: ACPD)가 공공

2) 이스라엘에 대한 해외의 비난에 대항하기 위해서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친 이스라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활동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COVID 19로 중단되었던 사업을 2020년 11월에 다시 재개하였다. 친이스라엘 단체의 이스라엘 홍보 활동은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The Jerusalem Post, 2020).

외교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정부에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영국 공공외교의 가장 상위 조직은 자문 이사회(Supervisory Board)로, 이들은 외무부의 장기적인 평판 제고와 성공적인 업무를 위해 부서의 전략적 방향, 감독, 지원 및 문제점에 대해 자문한다. 그와 더불어 공공외교 관리 이사회(Management Board)는 장관이 설정한 부서별 우선순위와 목표를 공공외교 조직이 수립하도록 관리하며, 자문 이사회를 지원하고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외교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부서 간 조치가 필요한 문제나 위험과 관련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관리 이사회(Management Board)에 보고한다(U.K.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2023).

독일은 연방 하원의 문화 미디어 위원회(Committee for Culture and Media Affairs)가 공공외교 위원회의 역할을 한다(German Bundestag, 2023).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방 차원의 문화 미디어 관련 정책에 관여하고, 공영 방송인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와 프러시안 문화재단, 국립 영화, 역사 유적지 홍보 등을 모니터하고 감독한다.

폴란드의 경우는 국무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공 문화외교 협의회(Narada Dyplomacji Publicznej i Kulturalnej)'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성 위원은 외무부 사무총장, 문화, 국가 유산 및 스포츠부, 아담 미키에비치 인스티튜트(Adam Mickiewicz Institute) 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의 장(長)들로 구성되어 있다(Po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3). 튀르키예도 2019년 제시한 공공외교 조정 시스템(Public Diplomacy Coordination System:KADIS)이 포함하는 공공외교 조정 이사회(Public Diplomacy Coordination Board)와 위원회를 공공외교 정책 결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외교 위원회로 볼 수 있다(Türkiye Directorate of Communications of Presidency, 2021).

체코는 각 정부 부처의 차관, 정부 보조금 단체의 장(長), 대통령실, 국회, 지역 협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체코 홍보 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Presentation of the Czech Republic)'를 조직해 국가 홍보 활동의 통합 조정을 통한 인적 및 재정 자원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한다(Czech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5). 핀란드 역시도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핀란드 홍보 위원회(Finland Promotion Board)를 운영하고 있으며(Fin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3), 스웨덴의 해외 홍보 위원회(Council for Promotion of Sweden Abroad)도 동일한 성격의 조직이라 할 수 있다(Swedish Institute, 2017).

호주는 외무, 국방, 무역을 담당하는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정책 논의를 한다(Australian Parliament, 2023). 캐나다는 경제외교뿐 아니라 문화외교와 공공외교에 관련한 입안 활동을 하는 외교와 무역에 대한 상원 상임위원회(Standing Senat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를 두고 있다(Canadian Government, 2022).

끝으로 대한민국은 '공공외교 위원회'와 '공공외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외교 정책 전반을 심의하며, 부처 간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 또는 충돌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정한다(김예경, 2022, p.16).

(4) 공공외교 기구

OECD 회원국 중 공공외교를 실행하기 위한 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15개국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언어와 국가 홍보를 위해 2023년 기준으로 24개국에 25개 해외 사무소를 유지하는 일본 국제교류 재단(Japan Foundation)이 일본의 공공외교 기구이다(Japan Foundation, 2023). 대한민국의 공공외교 기구로는 한국 국제교류 재단(Korea Foundation)이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되어 한국 공공외교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한국 국제교류 재단, 2023).

칠레에는 '칠레 이미지 재단(Fundación Imagen de Chile)'이라는 공공외교 기구가 존재하며(Imagen de Chile, 2023), 체코는 체코 센터(Czech Centre)를 통해 세계 각국에 체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2023년 기준 4개 대륙에 26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간 1,700가지의 활동을 하고 있다(Czech Center, 2023). 오스트리아는 문화 포라(Cultural Fora)(Austr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3)를, 프랑스와 헝가리는 각각 프랑스 인스티튜트(Institut Francais)와 리스트 인스티튜트(Liszt Institute)라는 기구를 두고 있다(Hungary List Institute, 2023). 그 외 이탈리아 문화원(Italian Cultural Institute), 폴란드 인스티튜트(Polish Institute)(Po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3), 포르투갈 외무부가 운영하는 카몽이스 인스티튜트(Instituto Camões),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인스티튜트(Instituto Cervantes), 튀르키예의 야누스 엠레 인스티튜트(Yunus Emre Institute, 2023) 등 각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기구들이 언어와 문화 예술, 과학을 매개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공공외교의 핵심인 해외 대중과의 소통에서 주요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방송 미디어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기구를 보유한 국가는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이 있다. 영국의 공영 국제 방송국인 BBC 월드 서비스는 1925년에 개국하여 제2차 세계 대전과 냉전 시대, 걸프전을 차례로 거치면서 2021년 기준으로 42개 언어로 방송을 송출하며, 3억 5천 1백만 명의 청취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영국 외무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은 2021년 기준으로 9천 4백 4십만 파운드이다(Davie, 2021). 공공외교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국제방송은 미국 글로벌 미디어 기관(U.S. Agency for Global Media: USAGM)에서 담당한다. USAGM은 주당 3,000시간 분량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6개 대륙 모두에 송출하며, 송출 범위는 100개국에 62개 언어로 매주 3억 5천 4백만 인구에게 전송한다(U.S. Department of State, 2021).

과거에 비해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지만(King, 2012) 캐나다는 라디오 캐나다 인터내셔널(Radio Canada International)로 해외 대중과 캐나다 간의 국제적 소통을 수행한다. 호주는 외무부 예산을 지원받아 텔레비전, 라디오, 웹 사이트, 앱으로 해외 40개 이상 지역의 천만 명 인구에게 호주의 뉴스와 문화를 송출하는 호주 방송사(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BC)라는 공영 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독일도 외무부의 지원을 받으며 도이체 벨레(DW)가 미디어 공공외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ABC, 2020; 진행남, 2020).

(5) 공공외교 문서

공공외교 평가와 계획, 실행에 관한 정부 문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체코, 이스라엘, 대한민국, 미국, 5개국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중 호주의 경우, 2007년 상원 위원회에서 공공외교에 대해 대대적인 논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다수의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었다(Australian Parliament, 2004). 2014년~2016년에 호주는 공공외교 전략서를 발간하였고, 2018년 8월에는 소프트 파워 리뷰(Soft Power Review)를 출간하였다(Australi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4).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공공외교인 하스바라(Hasbara) 외교를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공외교를 주제로 여러 간행물을 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문서로는 연례 이스라엘 국가 전략서인 '이스라엘 전략 분석(Strategy Analysis of Israel)'을 들 수 있는데, 이 문서는 매년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2023).

대한민국의 경우는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종합 시행계획'에 따른 활동 계획 문서와 전년도 활동 실적 평가 문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한다(김예경, 2022, p. 16). 미국은 공공외교 예산, 사업, 실적 등에 관한 포괄적 문서로서 '연간 공공외교 종합보고서(Comprehensive Annual Report on Public Diplomacy: ACPD)'를 연례적으로 발간하고, 체코 역시도 공공외교 연례 보고서(Czech Diplomacy)를 발간한다(Czech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1).

한편 공공외교 문서를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OECD 회원국들은 그 수가 10개국에 달한다. 캐나다의 경우 2005년 '캐나다의 국제 정책문(International Policy Statement of Canada)'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Pierre, 2005). 에스토니아의 비정기 공공외교 문서로는 2021년 에스토니아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기후외교와 에스토니아 디아스포라 액션 플랜 2022-2025(Action plan for climate diplomacy and the action plan for the Estonian diaspora for 2022-2025)'이 있다. 이 플랜의 첫번째 목적이 '에스토니아 정체성의 해외 홍보'이며, 해당 문서에서 '공공외교 증진'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됨으로써 에스토니아 정부의 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Eston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1).

멕시코의 비정기 공공외교 문서로는 외교부와 외교부 산하 '마티아스 로메로 인스티튜트(Institute Matias Romero)'가 공동 발간한 '280자로 표현되는 공공외교(LA DIPLOMACIA PÚBLICA EN 280 CARACTERES, 2019)'가 있다(Mexic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9). 이 문서는 공공외교의 중요성과 공공외교의 촉진을 위한 디지털 외교(E-diplomacy)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비정기 공공외교 문서로는 네덜란드 외무부의 정책 평가부(Policy and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가 네덜란드 정부의 2010~2014년 공공외교 정책에 대해 평가한 '공공외교 정책 리뷰 2010-2014 (Policy Review Public diplomacy 2010-2014)'가 있다(Netherlands Government, 2021).

이 밖에 2002년 영국 정부가 발간한 윌튼 리뷰(Wilton Review)[3]와 2005년 공공외교 사업 분석보고서

인 카터 경 리뷰(Lord Carter's Review)[4], 같은 2005년에 발간된 '노르웨이 공공외교(Norwa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5)', 2015년의 '폴란드 홍보 방향 2015 (Kierunki Promocji Polski do 2015)'(Ociepka, 2012)와 '슬로베니아: 안전, 성공, 국제적 존경(SLOVENIA: Safe, Successful, Globally Respected)'(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Slovenia, 2015), 2019년 튀르키예의 '공공외교 전략서와 실행 계획서(National Public Diplomacy Strategy Paper and Action Plan)' (Directorate of Communications of 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Türkiye, 2021) 등이 OECD 회원국 사이에서 공공외교에 관한 비정기 문서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6) 공공외교 조직

공공외교를 위한 중앙 조직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모두 16개국으로, 호주는 공공외교와 정보부(Public Diplomacy and Information Branch), 체코는 공공외교부(Public Diplomacy Department), 핀란드는 공공외교 부서(Unit for Public Diplomacy), 독일은 3개 부서에 공공외교과를 조직하고 있다. 그리스는 공공외교사무국(General Secretariat for Greeks Abroad and Public Diplomacy), 이스라엘은 공공외교부, 공공외교사무국, 공공외교과를 조직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공공외교 총괄과, 디지털 공공외교과, 정책 공공외교과와 공공외교 대사 조직도 갖추고 있다. 그 외 스페인, 튀르키예, 미국도 공공외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은 재외공관에만 공공외교 조직이 있거나 담당관만 둔 상태이다.

(7) 웹 사이트

오늘날 공공외교를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 웹 사이트 현황을 살펴보면, OECD 38개국 중 23개국이 해외 대중에게 자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정보를 외무부 웹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

---

3) 윌튼 리뷰(Wilton Review)는 2002년 영국 하원 위원회에 제출된 공공외교 보고서로 해당 보고서의 책임자였던 외무부 공무원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것이다. 보고서의 결론은 영국의 공공외교 활동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조율이 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는 공공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 공공외교의 전반적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영국에 대한 인식을 모니터할 수 있는 단일한 시스템 설립을 촉구하였다.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 (검색일: 2023. 2.3).

4) 카터 경 리뷰 (Lord Carter's Review)는 2005년 영국 하원에 제출된 보고서로 공공외교에 투입된 재정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문서이다. 영국 정부가 두 공공외교 기구(BBC World 와 British Council)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서의 결론이었다. (U.K. Parliament, 2005).

5) 공공외교 정보를 탑재한 외무부 웹 사이트를 가진 국가는 미국, 한국, 호주, 이스라엘, 폴란드, 체코, 영국, 튀르키에, 독일,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이다. 각국의 외무부 웹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상기 조사 결과는 공공외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요소로 법, 예산, 위원회, 그리고 실행에 필요한 요소로 기구, 문서, 조직, 웹 사이트가 실제 국가들이 공공외교를 제도화하는데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또한 각 요소가 제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이에 따라 전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외교 제도 현황 조사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요소들이 OECD 회원국의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 분석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타당성을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문제와 변수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공공외교의 정책 수립 수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또한 공공외교의 실행 수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OECD 회원국의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공공외교 제도화 수

미국 https://www.state.gov, 대한민국 https://www.mofa.go.kr, 호주 https://www.dfat.gov.au,
이스라엘 https://www.gov.il/en/departments/ministry_of_foreign_affairs, 폴란드 https://www.gov.pl/web/diplomacy,
체코 https://mzv.gov.cz, 영국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foreign-commonwealth-development-office,
튀르키에 https://www.mfa.gov.tr, 독일 https://www.auswaertiges-amt.de,
캐나다 https://www.international.gc.ca/global-affairs-affaires-mondiales, 일본 https://www.mofa.go.jp,
이탈리아 https://www.esteri.it, 그리스 https://www.mfa.gr, 스페인 https://www.exteriores.gob.es/, 핀란드 https://um.fi,
프랑스 https://www.diplomatie.gouv.fr,
슬로베니아 https://www.gov.si/en/state-authorities/ministries/ministry-of-foreign-and-european-affairs/,
포르투갈 https://portaldiplomatico.mne.gov.pt,
스웨덴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for-foreign-affairs/, 덴마크https://um.dk,
네덜란드 https://www.government.nl/ministries/ministry-of-foreign-affairs/,
노르웨이 https://www.regjeringen.no/en/dep/ud/id833/,
스위스 https://www.admin.ch/gov/en/start/departments/department-foreign-affairs-fdfa.html (검색일: 2024.3.13).

준의 높고 낮음의 의미는 공공외교의 상대적 효율성이나 성과, 또는 비교 요소의 상대적 우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외교를 시행하는 국가 가운데는 강대국과 중소국이 혼재되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강대국의 공공외교 예산이 중소국의 공공외교 예산보다 높게 책정될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이 풍부한 강대국이 중소국보다 더 많은 공공외교 수행 기구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런 경우 강대국의 공공외교 실행 수준이 더 높다고 분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각기 다른 국력으로 인하여 공공외교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의 질적 차이는 당연한 귀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간의 구성 요소별 우열보다는 공공외교의 제도화에 필요한 구성 요소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 국가의 공공외교 제도가 공공외교 정책 수립과 공공외교 집행이 가능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면, 해당 국가는 공공외교를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인정하여 공공외교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양적 연구로 넘어가기 위해 종속 변수를 지수화해 보면, 우선 각 요소에 기본 1점을 부과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여 제도 내에서 중간 정도의 중요도는 2점,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3점을 부여한다.

① 공공외교를 명시한 법이 있으면 3점을 부과한다. 대부분의 정책은 적극적 의미의 법률유보원칙(法律留保原則)에 따라 법적 근거를 통해 정당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기에(이명웅, 2004) 법은 공공외교의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② 공공외교를 위한 예산이 '공공외교 예산'으로 명시되어 책정되어 있으면 3점을 부과한다. 예산은 특정 정책에 대한 추진력의 근거가 되고, 법과 함께 주요한 공식적 제도의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박기주, 2014, pp. 257-258). 그러나 '공공외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문화외교 예산의 대리지표(proxy index)가 될 수 있는 유네스코(UNESCO ·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기금이 확인되면 예산 집행 면에서의 현실적 오차를 줄이기 위해 1점을 부과한다.

③ 공공외교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으면 2점을 부여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정책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참여 위원의 의견은 정책에 반영되는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서인석 외, 2010).

④ 구체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전문적인 외교 부서 조직(양명 & 차창훈, 2014, p. 372)이 있는 경우 2점을 부과하고, 재외공관에만 공공외교 부서가 있거나 담당관만 있다면 1점을 부과한다.

⑤ 공공외교의 실행을 위한 전담 기구가 존재하면 3점을 부과한다. 전담 기구는 각 부보다 높은 위상을 가지고 독자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조정, 정책의 강화와 정체성 유지, 정책 예산 편성을 합리화할 수 있게 하며, 실제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이다(서정필, 2021).

⑥ 공공외교에 초점을 두고 작성되며, 정부의 태도와 입장 그리고 정책과 실천 사항,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양명 & 차창훈, 2014, p. 374) 문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경우는 2점,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경우는 1점을 부과한다.

⑦ 최근 다양한 대상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실효적인 공공외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웹 사이트(김용훈,2022)에 공공외교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면 1점을 부과한다. 정책 수립 수준과 실행 수준을 이루는 구성 요소의 총합은 각각 8점으로 하여 전체 제도화 수준의 합계는 16점이 된다.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 분석 지표에 따라 OECD 회원국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 지수를 아래 <표 1>과 같이 제시한다. 이는 종속변수가 된다.

<표 1> OECD 회원국의 공공외교 제도화(정책 수립/실행) 수준 지수

호주	13(5/8)	덴마크	4(1/3)	아일랜드	1(1/0)	멕시코	6(3/3)	스페인	7(1/6)
오스트리아	4(1/3)	에스토니아	2(1/1)	이스라엘	13(5/8)	네덜란드	4(1/3)	스웨덴	5(3/2)
벨기에	2(1/1)	핀란드	6(3/3)	이탈리아	7(1/6)	뉴질랜드	1(1/0)	스위스	3(1/2)
캐나다	(4/4)	프랑스	6(1/5)	일본	8(1/7)	노르웨이	3(1/2)	튀르키에	10(3/7)
칠레	4(1/3)	독일	9(3/6)	한국	16(8/8)	폴란드	12(5/7)	영국	11(5/6)
콜롬비아	1(1/0)	그리스	9(6/3)	라트비아	1(1/0)	포르투갈	5(1/4)	미국	16(8/8)
코스타리카	1(0/1)	헝가리	4(1/3)	리투아니아	1(1/0)	슬로바키아	1(1/0)		
체코	11(3/8)	아이슬란드	1(1/0)	룩셈부르크	1(1/0)	슬로베니아	5(1/4)		

출처: 저자 작성

3) 독립변수와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22~2023년 OECD 국가들의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에 대한 결정요인을 탐색하기에 2018년~2021년 사이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영향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은 경제적 능력을 의미한다.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국가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 역시도 상이(相異)할 가능성이 있다. 이성적인 이유에 따라(Rasmussen, 2009) 자국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는 추론 하에 공공외교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판단하는 국가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Melissen, 2005)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다. 반대로 공공외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국가들은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을 상승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국가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되는 변수 중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으로 1인당 GDP 와 GDP 대비 무역 비율을 변수로 분석한다.

군사 안보적 요인은 군사 안보 위협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사 안보 위협은 국가들의 주관적인 판단

의 영역이다. 그러나 자국의 군사 안보에 대한 위협 정도를 높은 수준으로 판단하는 국가들은 공공외교가 가지는 소프트 파워적 효과를 기대하며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군사 안보 위협 요인과 관계있는 변수로는 국방예산(이상목, 2000, p.162), 병력 증강 또는 미래 군사 안보력 증강을 들 수 있다(김규철, 2020). 군사 안보 위협으로 인하여 국방예산을 증액시키는 국가, 전체 병력 수를 증강하는 국가, 국방연구비 비율을 증강하는 국가가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 안보적 요인으로는 국가 재정 지출 대비 국방예산 비율, 국가 연구비 대비 국방연구비 비율, 총 병력 수를 변수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요인이란 사회문화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문화 교류는 관광, 문화, 예술 교류, 그리고 정부 간의 공식적 채널을 통한 외교 교류를 포함한다(오기성, 1998). 사회문화교류가 공공외교의 주요 활동으로 활용되어 심지어는 공공외교의 유사 개념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관광, 문화, 외교 교류가 활발한 국가들의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이 높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입국 외래 관광객 수, 재외공관 수, 문화 상품 수출액을 변수로 분석한다.

각 요인별 변수 데이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세계은행 World Bank, UN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사용한다. 1인당 GDP는 OECD 2021 자료, GDP 대비 무역 비율은 세계은행 2021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정부 재정 지출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세계은행 2020년 자료, 국가연구비 대비 국방연구비는 OECD 2021년 자료, 총 병력 수는 세계은행 2019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외래 관광객 입국자 수는 세계 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9) 자료, 재외공관 수는 UN 2021 자료, 문화 상품 수출액은 UNESCO 2019 자료를 사용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실증의 시작으로 OECD 국가들의 공공외교 제도화 상황을 먼저 파악함이 필요하다. 전체 OECD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국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을 정책 수립 측면과 실행 측면에서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조사된 OECD 회원국의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을 지수화한다. 지수화시킨 OECD 회원국들의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OECD 회원국의 경제적, 군사 안보적, 사회 문화적 요인을 계량화하여 독립변수로 두고 SPSS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공공외교의 부문별 수준에 영향력 있는 요인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유의 수준은 0.1로 설정한다. 회귀식 자체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유의확률을 확인하고, 독립변수 간(間)의 상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산 팽창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이 10 미만인지 확인한다.

4. 결과

1)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 SPSS 다중 선형 회귀 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VIF
(상수)	2.599		1.077	.290	
GDP 1	-5.656E-5	-.286	-1.734	.093*	2.171
무역비율	.014	.271	1.765	.088*	1.872
총병력수	1.177E-6	.299	1.795	.083*	2.210
국방연구	.276	.503	2.175	.038**	4.255
국방예산	-.447	-.241	-1.384	.177	2.426
문화상품	-6.339E-11	-.098	-.429	.671	4.134
외래관광객	-1.927E-8	-.212	-1.191	.243	2.525
재외 공관	.041	.639	3.132	.004***	3.320
종속변수: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					

*p<0.1, **p<0.05, ***p<0.01.

SPSS 다중 선형 회귀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의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에 국가연구비 대비 국방연구비가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 결과는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군사 안보 위협의 방지에 관심 있는 국가가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군사 안보 위협 요인이 있을 때 전통적 군사적 대응 방법인 병력 수 증강도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군사 안보 위협 요인에 전통적 하드 파워인 병력 수 증강과 지식과 과학이 핵심 요소인 소프트 파워적 개념이 포함된 국방연구, 즉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모두에 관심을 기울이는 국가가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 강화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군사력 증강인 총 병력 수 변수(0.299)와 미래 군사 안보력 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국방연구비 비율 변수(0.503)의 표준화 계수 비교를 통해, 국방연구비 비율 변수가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PSS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 따르면 독립변수의 1 단위 증가 시 국방연구비가 제도화 수준에 0.276의 증가를 가져올 때 총 병력 수는 1.177E-6이라는 아주 작은 양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전통적 하드 파워인 병력 수 증강보다는 미래의 군

사 안보력 증강에 더 관심있는 국가일수록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군사 안보 위협 요인이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 강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가 재정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군사 안보 위협에 대한 대처로 단순히 국방예산 비율만 높다고 해서 해당 국가의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SPSS 다중 선형 회귀 분석 결과, 국가 경제력 중 국민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는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에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즉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 강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GDP 대비 무역 비율은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에 작지만 정(+)의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도출되었다.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해외 외교 교류의 거점이 되는 재외공관 수는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인 라스무센(Rasmussen, 2009)의 연구에서 현대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재외공관 수와 공공외교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과는 다른 결과라는 것이 흥미롭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인터넷이 발달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외교 거점이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공공외교 정책 수립 수준 SPSS 다중 선형 회귀 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VIF
(상수)	1.703		1.428	.164	
GDP 1	-2.059E-5	-.222	-1.277	.212	2.171
무역	.005	.186	1.152	.259	1.872
병력	5.915E-7	.320	1.825	.078*	2.210
국방연구	.169	.655	2.691	.012**	4.255
국방예산	-.097	-.112	-.609	.547	2.426
문화상품	-1.628E-11	-.054	-.223	.825	4.134
외래 관광객	-1.109E-8	-.260	-1.387	.176	2.525
재외공관	.008	.261	1.215	.234	3.320
종속변수: 공공외교 정책 수립 수준					

*p<0.1, **p<0.05, ***p<0.01

SPSS 다중 선형 회귀 분석 결과, 국가연구비 대비 국방연구비 비율이 1점 높아지면 OECD 회원국 공공외교의 정책 수립 수준은 0.169점 상승하고, 총 병력수가 1점 높아지면 OECD 회원국 공공외교의 정책 수립 수준은 5.915E-7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외교의 정책 수립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국가연구비 대비 국방연구비 비율, 총 병력 수가 도출되었다. 군사 안보적 요인 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은 공공외교 정책 수립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구체적 변수로 확인하면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 결정요인으로 도출되었던 경제적 요인 중 1인당 GDP, GDP 대비 무역 비율과 사회문화적 요인 중, 재외공관 수도 공공외교 정책 수립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도출되었다.

공공외교 정책 수립 수준의 결정요인으로 군사 안보적 요인 변수만 도출되었다는 것은 국가들이 공공외교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 군사 안보적 요인, 그 중에서도 군사 안보 위협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3) 공공외교 실행 수준 SPSS 다중 선형 회귀 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 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VIF
(상수)	1.249		.770	.447	
GDP 1	-4.087E-5	-.324	-1.864	.072*	2.171
무역	.010	.293	1.813	.080*	1.872
병력	5.765E-7	.230	1.308	.201	2.210
국방연구	.116	.331	1.358	.185	4.255
국방예산	-.367	-.311	-1.688	.102	2.426
문화상품	-4.999E-11	-.121	-.504	.618	4.134
외래관광객	-8.535E-9	-.147	-.784	.439	2.525
재외공관수	.033	.803	3.729	.001***	3.320
종속변수: 공공외교 실행 수준					

*p <0.1, **p<0.05, ***p<0.01

SPSS 다중 선형 회귀 분석 결과, 재외공관 수가 1 단위 높아지면 OECD 회원국 공공외교의 실행 수준은 .033 높아지고, GDP 대비 무역비율이 1 단위 증가하면 공공외교의 실행 수준은 .010 상승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1인당 GDP가 1 단위 높아지면 공공외교의 실행 수준은 -4.087E-5씩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OECD 회원국 공공외교의 실행 수준에 국가 재정 대비 국방예산 비율, 총 병력 수, 국가연구비 대비 국방연구비 비율, 입국 외래 관광객 수, 문화 상품 수출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은 재외공관 수 (+), 1인당 GDP (-), GDP 대비 무역 비율(+)이 도출되었다.

공공외교 실행 수준은 국가가 공공외교의 실제적 활동과 집행에 무게를 얼마나 두는 지를 설명한다. 통계 분석 결과 실행 수준 면에서 군사 안보적 요인은 정책 수립 면에서 와는 달리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공공외교의 실행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도출된 점이 흥미롭다.

구체적 변수로 살펴보자면 외교 교류의 현실적 공간 조건이 되는 재외공관 수가 공공외교의 실행 수준에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1인당 GDP가 부 (-) 의 영향을 끼치며, GDP 대비 무역 비율은 작으나마 정(+)의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실제 공공외교를 활발히 실행하는 국가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공공외교를 수단시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해외와의 활발한 무역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공외교의 실행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더욱이 국민의 경제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에서는 경제 이익 추구 목적으로 공공외교를 수단화하려는 의도가 더욱 없기 때문에 1인당 GDP가 높아질수록 공공외교의 실행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6)]

실행 수준 분석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재외공관 수로 도출된 점은 국가의 경제력이나 군사 안보 위협 요인보다는 사회문화적 교류, 그 중에서 공식적인 외교 교류가 국가 공공외교의 실행 수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식적인 외교 소통의 장(場)인 재외공관을 많이 보유한 국가의 공공외교 실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도출된 점은 현대사회에서 공공외교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으로 실행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외 대상 공공외교의 실제적 실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외공관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이 국가마다 상이한 현상에서 연구 주제를 발굴하였다. OECD 회원국 공공외교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고, 그 차이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탐구

6) 1인당 GDP가 상당히 높으면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2021년 OECD 자료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아일랜드 107,862달러, 룩셈부르크 132,474달러, 노르웨이 79,163달러, 스위스 77,236달러로 발표되었고, 각각의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은 0, 0, 2, 2로 측정되었다.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외교의 정책 수립 수준, 실행 수준, 그리고 두 측면을 포괄하는 제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각기 다르게 도출되었다. 공공외교 정책 수립 수준의 결정요인은 군사 안보 위협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군사 안보 위협 요인이 있을 시 전통적인 군사적 대응 방식으로 군 병력 수를 증강하거나, 미래에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군사 안보 위협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가연구비 대비 국방연구비 비율을 높이는 국가가 공공외교 정책 수립 수준도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사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자 하는 두 전략 가운데, 종속변수에 대한 총 병력 수의 영향은 적었고, 국방연구비 비율의 영향이 크게 작동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통계 분석 결과를 통해, 공공외교는 미래 군사 안보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들이 취하는 긍정적인 수단임이 드러났다.

실행 측면에서는 국익이라는 목적을 위해 공공외교를 수단으로 삼는 변수보다는 해외 국가나 대중과의 교류와 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외교 교류의 거점인 재외공관 수가 실행 수준에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 경제력과 국민 경제 수준의 지표인 1인당 GDP는 실행 수준에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와의 무역 비율은 공공외교 실행 수준에 작은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의 결정요인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방연구비 비율과 재외공관 수로 도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GDP 대비 무역 비율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인당 GDP는 작은 부(-)의 영향력, 총 병력 수는 작은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공공외교와의 관련성이 거론된 경제적 요인, 군사 안보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들에 대해 실증적 검증을 하였다. 또한 그 영향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공공외교 연구의 지식 확장과 다양성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질적연구로 진행된 기존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공공외교의 중요 영향 요인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계량적으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은 공공외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목적으로 공공외교가 수단시 되는 경향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 형성이 가능한 외교 교류나 무역 교류가 공공외교 실행과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외교가 국익만을 추구하는 외교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군사 안보 위협 요인이 공공외교 정책 수립 수준과 제도화 수준의 결정요인이라는 분석 결과는 공공외교의 국익 목적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 하겠다. 본 결과는 국가가 자국의 군사 안보를 위하여 병력 증강과 국방연구비 비율 증대라는 하드 파워적 대응과 함께 소프트 파워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상기 연구 결과들은 공공외교는 국익을 추구하면서도, 절대적으로 국익만을 목표로 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공외교 특유의 정체성을 OECD 국가들이 인식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그간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공공외교의 복잡성과 개념의 애매성으로 인해 시도되지

않았던 평가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기존에는 공공외교 제도화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OECD 38개국의 공공외교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공공외교 제도화에 관한 틀을 제시하였다. 이 점이 본 연구의 자료 조사가 가지는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과 미국의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이 동일한 최고점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공공외교가 공식적, 학문적으로 미국에서 출발했고, 한국은 미국식 공공외교를 참고하여 시작한 것으로 인한 양국 공공외교의 제도적 유사성에서 기인한 한계일 수도 있다. 또한, 연구 분석이 한국의 공공외교 제도 검토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한국 공공외교 연구자의 태생적 한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가들의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 측정과 그 결정요인이라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점에서 후속 연구에 대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OECD 전체 회원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조사가 대사관 담당자나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만을 통해 이루어진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혹시 공개되지 않은 공공외교 관련 자료가 있다면 미처 파악하지 못했을 공공외교 정보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영어로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외국어 번역기를 사용해 조사하였다. 그로 인해 외국어 행간의 맥락과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언어적 한계도 있을 수 있음을 알린다.

향후 후속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 분석 지표를 개선하면서, 국가들의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현실과의 적합성과 시의성이 중요한 공공외교에서 꼭 필요한 연구과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OECD 회원국 공공외교 제도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OECD를 넘어 연구 대상국을 더욱 확대한다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수 연구자, 해외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제안한다. 해외 연구자와의 협업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을 수 있다. 아울러 보다 정확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소프트 파워 자산인 지식과 교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국제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공공외교 정신에 부합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설명한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과 공공외교 매력도가 서로 정(+)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재차 밝힌다. 현재 주변국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경우,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대로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을 고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의 호감을 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분쟁과 충돌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목도하면서, 공공외교 제도화 수준과 실제 공공외교 매력도 간의 연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부분도 향후 연구 주제로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김규철. (2020). 러시아의 군사전략: 위협 인식과 군사력 건설 동향. 군사논단, 100(특별), 293-354.

김선화. (2020). 제도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정무역 프랙티스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예경. (2022).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975

김용훈. (2018). 실효적인 공공외교정책을 위한 법제도적 전략－영국의경험을 통한 공공외교법 개정 방향성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5*(2), 167205.

김태환. (2020). 중견국 외교에 대한 지위 정체성 접근: 호주, 터키, 인도네시아 공공외교 사례와 한국에 대한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박기주. (2014). 과학기술분야 연구회R&D 예산의 현황과 구조 분석: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3*(1), 237-262.

서인석, 이동규, & 박형준. (2010).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정책결정 행태 요인에 관한 연구: 수자원 예산심의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의사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1), 79-100.

서정필. (2021). 재외동포청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재외동포신문.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674(검색일: 2023. 6.13)

신진. (2017). 공공외교의 한 · 미간 비교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5*(4), 1-26. 10.34221/KJPS.2017.25.4.1

양명, & 차창훈. (2014). 중국 공공외교의 등장과 강화: 조직구조와 수행방식을 중심으로. *21 세기정치학회보, 24*(1), 363-392.

오기성. (1998).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사회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10.*73-104.

이명웅. (2004). 입법원칙으로서 법률유보 · 의회유보 · 비례의 원칙. *월간 법제, 11.*

이상목. (2001). 국방비 결정요인의 이론적 쟁점과 일반화. *국방정책연구, 51*(0), 143-165.

정병걸, & 염재호. (2007). 정부혁신, 정부경쟁력, 국가경쟁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7, 1-13.

조기원. (2017). 일본 '위안부 등재' 심사중인 유네스코 분담금 또 보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93671.html (검색일:2023. 5. 3)

진행남. (2020). 한국 미디어 공공외교. http://www.jpi.or.kr/wpcontent/uploads/2020/06/1301_%ED%95%9C%EA%B5%AD%EC%9D%98-%EB%AF%B8%EB% 94%94%EC%96

ABC. (2020). International reaches audiences close to 11 million each month on television, radio and online.

https://about.abc.net.au/pressreleases/abc-international-reaches-close-to-11-million-eachmonth-on-television-radio-and-online/ (검색일: 2023. 5. 6)

Ahren, R. (2016). Only 8% of Foreign Ministry budget is used for diplomacy. The Times of Israel. https://www.timesofisrael.com/only8-of-foreign-ministry-budget-is-used-for-diplomacy/(검색일: 2023. 5. 6)

Charycka. (2018). 50 mln w 6 lat: dotacje na dyplomacjępubliczną w MSZ. Publicystyka. https://publicystyka.ngo.pl/50-mln-w-6-latdotacje-na-dyplomacje-publiczna-w-msz (검색일: 2023. 4.7)

Goichman, R. (2022). This anti-BDS Initiative Failed. So Israel Throws Another $30 Million at It. HAARETZ. https://www.haaretz.com/israel-news/2022-01-26/ty-articlemagazine/.premium/this-anti-bds-initiative-failed-soisraelthrows-another-100-million-nis-at-it/0000017f-db50-df9ca17f-ff58b4110000 (검색일: 2023. 5. 6)

King, A. (2012). Radio Canada International goes off-air, moving onlineonly after 67 years of shortwave service. J-Source. https://jsource.ca/radio-canada-international-goes-off-air-movingonline-only-after-67-years-of-shortwave-service/ (검색일: 2023. 5. 2)

Melissen, J. (Ed.). (2005). *The new public diplomacy*(pp. 292-31).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Nye, J. S. (2004): *Power in the Global Information Age: From realism to globalization*. Routledge.

OCiepka, B. (2012). Polish Public Diplomacy. E-International Relations. https://www.e-ir.info/2012/10/08/polish-publicdiplomacy/

Polk, M. (2011). Institutional capacity-building in urban planning and policy-mak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ccess failure?. *Planning, Practice & Research, 26*(2), 185-206.

Rasmussen, I. W. (2009). Towards a theory of public diplomacy: A quantitative study of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The Fletcher School (Tufts University), 4.*

Steinmo, S., Thelen, K., & Longstreth, F. (Eds.). (1992).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Jerusalem Post. (2020). Strategic Affairs Ministry introduces fund for pro-Israel NGO. https://www.jpost.com/israel-news/strategicaffairs-ministry-introduces-fund-for-pro-israel-ngos-650564 (검색일: 2023. 5. 6)

웹페이지

대한민국 외교부. (2022). 2023 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https://www.mofa.go.kr/www/wpge/m_22716/contents.do (검색일: 2023. 6. 12)

한국 국제 교류재단. (2023). https://www.kf.or.kr/kf/main.do?langTy=KOR

Australia Parliament. (2004). 2004-2007 Public diplomacy in Australia.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Senate/Foreign_Affairs_Defence_and_Trade/Completed_inquiries/200407/public_diplomacy/report/c04 (검색일: 2023. 5. 1)

Australian Parliament. (2023). Senate Standing Committees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Senate/Foreign_Affairs_Defence_and_Trade (검색일: 2023.2.8)

Austr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3). Cultural Fora. https://www.bmeia.gv.at/en/european-foreignpolicy/internationalcultural-policy/cultural-fora/ (검색일: 2023. 5. 1)

Czechia Foreign Affairs Ministry. (2005). Concept For a Unified Presentation of the Czech Republic. https://www.mzv.cz/file/23684/concept_unified_presentation_czech_republic.pdf (검색일: 2023. 3.2)

Czech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1). Diplomacy 2021. https://www.mzv.cz/file/4872327/Czech_diplomacy_2021.pdf (검색일: 2023. 5.4)

Eston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1). Government approves the Foreign Ministry's action plans for climate diplomacy and the Estonian diaspora. https://www.vm.ee/en/news/governmentapproves-foreign-ministrys action-plans-climate-diplomacyand-estonian-diaspora (검색일: 2023. 6. 5)

Fin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3). Finland Promotion Board. https://um.fi/finland-promotion-board2# (검색일: 2023.4.9)

German Bundestag. (2023). Committee on Cultural and Media Affairs. https://www.bundestag.de/en/committees/a22# (검색일: 2023.5.1)

Greek Foreign Affairs Ministry. (2021). Law on General Secretary of Public Diplomacy. https://www.mfa.gr/images/docs/eukairies_stadiodromias/organismos-ypex.pdf (검색일: 2023.3.4)

Hungary List Institute. http://hungarianculture.cn/en/about-us/ (검색일: 2023: 5.23)

Imagen de Chile. https://marcachile.cl/en/imagen-de-chile/ (검색일:2023. 5. 2)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2023). 2023 Israel Strategy Analysis. https://www.inss.org.il/publication/strategic-analysisisrael-2023/(검색일: 2023. 6.8)

Japan Foundation. https://www.jpf.go.jp/e/world/ (검색일: 2023.6.5)

Mexico Government. (2022). 2023 Budget f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ttps://www.gob.mx/cms/uploads/attachment/file/790111/2_2022_1216_MAT_sre.pdf (검색일: 2023.4.3)

Mexic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9). Public diplomacy with 280 characters. https://www.gob.mx/cms/uploads/attachment/file/495328/Diplomacia_publica_en_280_caracteres.pdf (검색일: 2023.6.7)

Netherlands Government. (2021). 2021-2024 Policy review of Public diplomacy | Report | Policy and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IOB) (iobevaluatie.nl) https://dutchculture.nl/sites/default/files/atoms/files/dutch-international-cultural-policy-2021-2024_eng.pdf (검색일: 2023.3.4).

Norwa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5). Norway's Public Diplomacy. https://www.regjeringen.no/globalassets/upload/ud/vedlegg/public.pdf (검색일: 2023. 6.10)

OECD. https://data.oecd.org/ (검색일: 2023. 5. 4)

Poland Foreign Ministry. https://www.gov.pl/web/diplomacy/polish-institutes(2023). (검색일: 2023.6.5)

Swedish Institute. (2017). Sweden Promotion Strategy. https://sharingsweden.se/app/uploads/2017/09/strategy-for-thepromotion-of-sweden-abroad-2.0.pdf (검색일: 2023. 1.21)

Türkiye Directorate of Communications of Presidency. (2021). National

Public Diplomacy Strategy Paper and Action Plan introduced. https://www.iletisim.gov.tr/english/haberler/detay/national-publicdiplomacystrategy-paper-and-action-plan-introduced (검색일: 2023.5.12)

U.K.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2023). Organization Chart.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foreign commonwealth-development-office/about/our-governance (검색일: 2023.5.13)

U.S. Agency for Global Media. (2023). Smith-Mundt Modernization. https://www.usagm.gov/who-we-are/oversight/legislation/smithmundt-modernization/ (검색일:2023. 6. 12)

U.S. Congress. (2023). https://www.congress.gov/search?q=%7B%22source%22%3A%22legislation%22%2C%22search%22%3A%22Public+Diplomacy+Modernization+Act+%22%7D&page=2 (검색일: 2023. 6. 12)

U.S. Department of State. (2021). The 2021 Comprehensive Annual Report on Public Diplomacy and International Broadcasting. https://www.state.gov/2021-comprehensive-annual-report-onpublic-diplomacy-and-international-broadcasting-2/ (검색일: 2023.1.3)

UNESCO. (2023). https://www.unesco.org/en (검색일: 2023.5.4)

WTO Database Tourism Statistics Database (unwto.org) (검색일: 2023. 5. 4)

Yanus Emre Institute. (2023). https://www.yee.org.tr/en/corporate/yunusemreinstitute (검색일: 2023. 4.3)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제4권 1호 (2024. 3)

Abstract

A Study on Measuring and Determinants of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Diplomacy in OECD Member Countries

Minju Myung*
(Lecturer of Global Servie Depart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ongju Choi**
(Professor of Global Service Depart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measures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diplomacy and explores the determinants that influence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diplomacy in OECD member countries. As a research method, the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diplomacy in each country are first presented in 38 member countrie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en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policymaking, implement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diplomacy are derived through SPS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revealed that the determinant of the level of policymaking is the military security threat, and the variable that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level of implementation is the number of diplomatic missions abroad. The variables that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diplomacy, which encompass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were the ratio of defense research funds and diplomatic missions abroad, followed by the trade -to- GDP ratio, which has a positive effect. It is confirmed that GDP per capita has a negative effect, and the total number of military personnel has a small positive effect. Public diplomacy is shown to be a significant means of policymaking by countries to prevent potential military security threats in the future. It was analyz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diplomacy tends to be driven more by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or foreign publics rather than by the pursuit of economic or military interests.

Key words: Public Diplomacy,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quantitative research, empirical study, determinant

투고일: 2024. 01. 23.
최종심사일: 2024. 03. 12.
게재확정일: 2024. 03. 12.

* First Author, Lecturer of Global Service Depart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minju@sookmyung.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of Global Service Depart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jchoi@sookmyung.ac.kr

부 록

독립변수 데이터

국가	GDP1	무역 비율	국방 예산	국방 연구	병력수	외래 관광객수	재외 공관수	문화상품 수출액
호주	61944	410	4.6	6.4	78100	9466000	136	790507624
오스트리아	58861	111	1.4	0.2	179100	31884000	99	751586613
벨기에	58861	173	1.8	0.8	31650	9343000	106	1530929971
캐나다	52022	61	2.5	4.1	109273	32430000	144	1562420886
칠레	28415	64	6.3	0.9	161900	5431000	129	21066064
콜롬비아	17350	41	9.5	0	516050	4531000	117	105317231
코스타리카	23339	71	0	0	9800	3366000	60	10879234
체코	44198	143	2.8	0.8	23200	37202000	116	1273299014
덴마크	64877	112	2.5	0.4	60200	33093000	89	521545350
에스토니아	41300	157	5.7	2.1	34400	6103000	48	101970134
핀란드	54668	79	2.6	0	251700	3290000	85	80002840
프랑스	50544	61	3.3	10.7	383600	217877000	267	11430583346
독일	58386	89	2.6	4.3	207650	39563000	227	9384544503
그리스	31056	89	4.8	1.4	366850	34005000	135	207403289
헝가리	36665	163	301	1.2	59800	61397000	131	436676181
아이슬란드	57939	78	0	0	250	2202000	25	3581465